

## 회 요 세 펑



**정삼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부장

증거 기반(evidence-based) 의사결정은 통계, 연구자료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검증되지 않은 이데올로기나 직관 또는 경험에서 벗어나, 검증하여 타당성이 확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우리 주변에서 능민들의 노력과 경험에 의존하던 농업이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첨단 산업, 즉 스마트농업으로 변화가는 과정도 증거 기반 의사결정의 적용 예라 할 수 있다.

증거 기반 정책결정은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 중시되기 시작한 후 전세

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거 기반 정책수립 위원회법'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우리나라에는 2020년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통계와 같은 데이터를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정책의 효과성, 책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불가·금융·외환 등 종합 고려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효과를 거두려면 데이터, 조사연구자료 등의 품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고 활용도 쉬워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자 등이 데이터를 활용해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과 인식을 갖춰야 한다.

한국은행의 증거 기반 정책결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국내 불가, 경기 및 금융·외환시장 상황, 세계경제의 흐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look-at-everything approach) 한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들이 국내외 금융시장 데이터 및 실물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경제적·통계적 모델링을 통해 각종 조사연구 보고서를 생산한다.

지역본부에서도 지역경제 관련 각종 통계수집, 조사연구, 멘담 등의 업무를 통해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뒷받침한다. 광주전남본부의 경우 통계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분기마다 기아자동차 등 72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기업 경영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일회적 정보( anecdotal evidence)도 수집하고 있다.

통화정책, 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과 함께 활용이 쉬워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광주첨단3지구에 조성 중인 '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와 '데이터센터' 가 갖는 의미는 크다하겠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서비스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관·처리하는 컴퓨터를 갖춘 시설로 증거 기반 의사결정의 핵심 인프라이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부문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활용될 경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야 하는 데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전기는 서버 가동뿐 아니라 서버와 네트워크가 뿐만 아니라 열을 식히기 위한 냉방설비 유지에 사용된다. 일각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전력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역할, 신안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중요하다.

## 데이터센터 조성 큰 의미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행정이나 경제정책 수립뿐 아니라 의료, 취업, 교육, 환경,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최첨단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지정되어 국가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자부심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관련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다.

## 사 설

## '광주 문화관광사업' 지속 관리해야

광주시는 최근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파크와 동구 금남로나비공원 조성 등에 이어 이번엔 국비 3억원을 확보해 총장로 K-POP 스타클럽의 아간관광 명소를 위한 미디어파크 조성에 나선다. 도심을 밟고 하고 활력을 어떻게 얻어낼지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례로 총장로 K-POP 스타클럽에 가보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이 즐비하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아시아음식문화거리는 더 심하다. 밤에 비틀거리느는 청소년들의 고성과 무질서가 가관이다. 행정기관과 경찰의 협력이 절실히 한다.

광주시는 이런 기조 속에서 문화예술 정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 지원 및 권리보장을 비롯해 미디어아트 365 꿀잼 광주만들기 추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 명소 조성 등 8대 핵심 문화정책을 내놨다. 문화중심도시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문화예술인, 시민을 위한 프로젝트들이다. 전통적인 문화예술분야 지원뿐 아니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맞는 각종 시책과 아이

## 고령층 '언택트 고립' 배려 필요하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사람과 접촉 없이 물건을 주문이나 결제할 수 있는 '키오스크'와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자기기 사용에 미숙한 고령층이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격차인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어서 사회 계층 간 갈등과 단절이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골목 상권에 '무인점포'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햄버거 가게, 음식점은 아르바이트생 대신 무인 주문 기계(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

독서실과 호텔도 무인점포로 운영되고 있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광주·전남 은행 점포도 2012년 이후 해마다 줄고 있다. 현재 광주 시중은행 점포는 171개에서 133개로 38개 감소했고, 전남은 104개에서 93개로 11개 줄었다.

이렇게 무인점포와 무인 판매시설인 '키오스크'가 우리 주변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고령층은 답답하고 불편하다. 고령층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QR코드 스캔으로 주문과 예약, 그리고 간편 결제를 하는 것이 서툴거나 불가능하다.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장벽이 되고 있다.

우선 고령층도 적극적인 자세로 배워야 한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면 기기 사용법이나 무인시스템을 익혀야 한다. 사회 공동체가 이를 배려해야 한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역량교육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은행의 경우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같은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금융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이들도 고객이기 때문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목소리 반영을

## 기자수첩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역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은 지난 2018년 12월 발행했던 태안화학발전소 사고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여론에 힘입어 제정됐다.

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들은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비상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반면 지역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속수무책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안전 전문인력 부족과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업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선까지 처벌을 받게될지 모르고, 죄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사전 조치

를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 전에 불분명한 내용을 점검하고,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기간 연장과 가이드 라인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과 산업안전보건 설비를 개선에 대한 정부가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해도 산업현장의 변화가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취지는 퇴색될 것이다.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한 산업현장 만들기에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독 지 광 장

## 서민 울리는 투자사기 근절돼야

인터넷망의 발달과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중심 일상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범죄의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며 진화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은 메신저 피싱, 중고물품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사건은 비트코인 마진거래, 장외 주식 거래 등을 방지한 사이버 투자사기이다.

사이버 투자사기의 범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고수익을 내준다는 광고 문자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한 다음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 본인을 투자전문가라고 소개한 후 장외거래, 비트코인 마진 거래, 비상장 코인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내줄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그래프 등을 보여주고 단톡방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익 후기 등을 공유하며 해당 투자가 진실한 것처럼 믿을 수 있게 한다.

이에 피해자가 투자 상담 문의를 하면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보라면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입금받은 뒤 수익이 났다면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투자 거래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가 성공하면 더 많은 투자금을 유도해 입금받은 뒤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한 그래프와 거래내역 등을 보여주며 출금을 유도한다.

그러나 출금을 의뢰하면 세금 문제가 있으니 추가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거나 비정상 거래로 금융감독원에서 감사가 나와 기다려야 한다거나, 서버에 장애가 생겨 서버 복구비용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대며 출금을 미루고 결국은 연락이 두절되는 방식이며 주로 해외에 IP를 두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며 카톡에 이용된 전화번호 또한 대포폰인 경우가 많다.

보통 이러한 투자사기의 경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대포통장일 확률이 높으며 해당 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들은 여러 계좌를 거쳐 결국은 코인 거래에 이용되거나 사이버 도박자금과 섞여 출처

가 불분명해진다. 게다가 사이버 투자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다르게 지급정지도 할 수 없어 그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게 우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 일자리를 찾고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금을 입금하기 전 꼭 한번 확인해보자. 적어도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투자 방법이 비정상적이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정상적으로 승인된 거래가 아닌 단순 고수익 종목 광고 문자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익금 등으로 유인하는 광고 문자를 보고 시작한 투자라면 지금 당장 의심해보길 바란다. /한국골프학회부회장·체육학박사

## 생활정보전화

##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39
▲ 미아·기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3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秀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편 친 부	(062) 720-1073
경 제 부	(062) 720-1066~67	논 설 실	(062) 720-1006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전 산 실	(062) 720-1033
사 회 2 부	(062) 720-1043	월 간 국	(062) 720-1007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판 매 국	(062) 720-1004
문 화 부	(062) 720-1071	사 업 국	(062) 720-1011, 1099
사 진 부	(062) 720-1040	광 고 국	(062) 720-1016~17
기획팀사부	(062) 720-1045~46	관 리 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첨부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